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9. 17.(목) 총 6매(본문3, 참고3)	
담당 부서	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·과장 김석기, 사무관 전철주, 사무관 최두현, 주무관 이수용 ·☎ (044) 201-3213, 3221, 3223, 3222
	모빌리티정책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박효철, 사무관 김민정, 주무관 최상욱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, 4755
	건설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주종완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김민태 ·☎ (044) 201-3504, 4597, 4962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적극행정으로 혁신기업 성장·건설현장 공정성 강화

- 9월 1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월 17일(목)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'적극행정 릴레이 발표'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.

<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>

- (개요) 기관별 적극행정 주요과제 및 우수사례 연이어 발표
- (대상) 차관회의 참석 기관(27개 부처 등) + 청 단위 2개 기관
- (시기) '20.9.3(목) ~ 10.22(목), 7차에 걸쳐 진행(하루 4개 기관, 기관별 3분 발표)
- * 1차: 산업부, 과기부, 인사처 2차: 기재부, 중기부, 교육부, 행안부

- 국토부는 △혁신기업 성장지원 △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△수도권 주택공급 조기화 △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.

- ① (혁신기업 성장지원)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,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, 우수기술 판로 확대 등 국토교통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
- 특히, 중소기업 보유 우수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을 위해 기업성장지원팀 신설(20.7) 및 장관주재 기업성장지원위원회 발족

- ② (건설현장 공정성 강화)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(시장·준시장→기타공공기관 등 포함, 5~8천만원이상) 및 민간확산으로 건설임금 체불근절
- ③ (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)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* 연내 확정 및 사전청약 6만호 공급 추진('21년 하반기 3만호, '22년 3만호)
- ④ (그린리모델링 본격화)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*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성과 창출

* 공공건축물 2천동('20~'21년) 및 공공임대주택 22.5만호('20~'25년) 개설

□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·지원하고,
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,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.

①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

□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('21.4)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(규제 샌드박스)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,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*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였다.

* (반반택시) 자발적 동승할인 (스타릭스) 사전 확정요금제 (파파)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(마카롱 등 가맹택시) 앱미터기 기반 탄력요금제 등

- 이에 따라,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(^{3월}8개 지역→^{8월}26개 지역)되고,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(^{3월}2,600대→^{8월}16,264대)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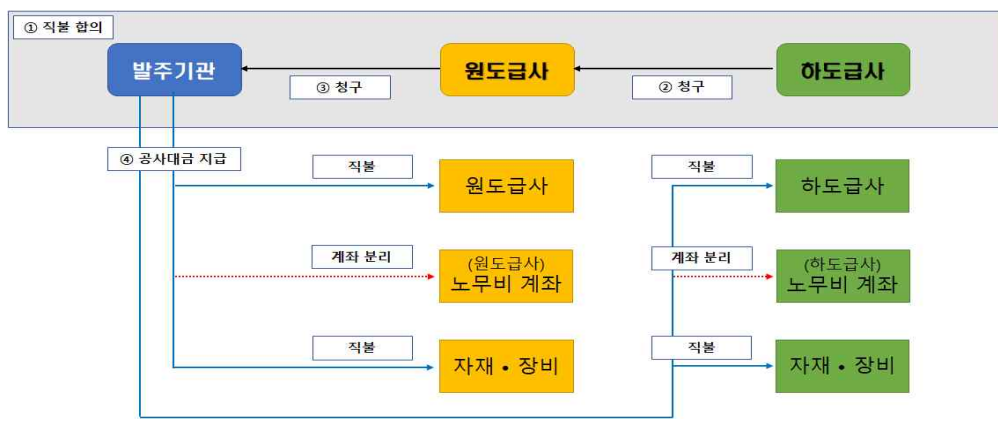
플랫폼 사업 제도화 추진경위

- 택시-플랫폼 대타협('19.3) → 택시상생방안 발표('19.7) → 운수사업법 개정('20.4)
- *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('20.5)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중

②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

- 노·사·전·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(건설분과)를 통해 「임금직접 지급제 개선방안(‘20.5)」을 마련하고, 이에 근거하여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였다.
-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되어,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.

<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내용(하도급지킴이) >



-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“코로나-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,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면서,
- “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,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 쓰겠다”고 밝혔다.

- ◇ 혁신성장 지원, 공정경제 실현,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, 그린리모델링 본격화를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
- ◇ 특히, 혁신성장 적극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였고, 장관주재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발족할 계획

1. 주요 실천과제

- **(혁신기업 성장지원^{중점})** 플랫폼 모빌리티 규제 혁신, 국토교통 혁신펀드* 조성, 우수기술 판로 확대 등 국토교통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
 - * 국토교통 혁신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('20년 170억 조성, '27년까지 3천억 조성 계획)
 - 특히, 중소기업 보유 우수 혁신기술의 공공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장관주재 “기업성장지원위원회”를 발족·운영할 계획
- **(건설현장 공정성 강화^{중점})**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(시장·준시장→기타공공기관 등 포함, 5~8천만원이상) 및 민간분야 확산유도*로 건설임금 체불근절
 - * 보증수수료 감면 등 체불근절 인센티브 확대('20.下) 및 건산법 개정으로 상습체불 공표기준 강화('20.下)
- **(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^{중점})** 광역교통개선대책* 연내확정, 사전청약 6만호 공급**
 - *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지역 7곳 중 2곳(하남·과천) 기 확정('20.5월) ** '21년 3만호, '22년 3만호
- **(그린리모델링 본격화^{중점})**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*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성과 창출
 - * 공공건축물 2천여동(~'21년, 국비 4,552억) 및 공공임대주택 22.5만호(~'25년, 국비 1조1,124억)

2. 실행계획

- **(기관장 선도)** △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중점과제로 관리
△장관주재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운영(반기)
- **(적극행정 기반 강화)** △ 국토교통 규제혁신 TF(1차관 주재) 중심의 규제정비
△적극행정 도우미* 지정 △업무다이어트 코너 개설 △국민아이디어 공모 등
 - * 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컨설팅 안건 해당여부, 면책제도 등 상담(메일·유선)
- **(인센티브)** 적극행정 우수공무원*(분기 8명), 적극행정 우수사례(분기 3개과) 선정, 연말 국민참여 MVP·우수·장려 선정 및 파격인센티브** 추가부여
 - * 장관표창, 5일 휴가, 포상금, BSC가점, 근평가점, 꽃바구니·축하케익(장관님 축하메세지)
 - ** 성과급 최고등급, 특별승진 가점, 모범공무원 우선추천 등

3. 우수사례

①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<기업지원, 규제혁신>

- (현황) 승차거부,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O2O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업체 속속 등장
 - 택시업계와 플랫폼업체 간 갈등을 극복하고 운송 플랫폼사업의 제도권 편입 및 기존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방안 추진
 - * 택시-플랫폼 대타협('19.3) → 택시상생방안 발표('19.7) → 여객법 개정('20.4)
- (추진내용) 플랫폼 운송업의 법적 기반 마련, 각종 진입규제 완화와 규제특례제도 등 적극행정을 통한 서비스 조기출시 지원

- ① **플랫폼 모빌리티 제도화** :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(여객법 개정, '20.4),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'모빌리티 혁신위원회' 운영 중(5.14~)
 - *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시행일 1년 후('21.4)로 지정
- ② **진입규제 완화** : 플랫폼과 택시의 원활한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(자동차 대수)을 1/8수준으로 대폭완화
 - * 특광역시의 경우 종전 4천대 이상에서 5백대 이상 택시 확보시 택시가맹사업 면허 발급
- ③ **규제특례** : 개정 여객법 시행('21.4.8.) 이전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조기 출시되고, 택시서비스도 고도화되도록 규제샌드박스로 지원
 - * 렌터카 기사알선, 택시사업구역 완화, 탄력요금제, 선결제, 앱미터기 허용 등

- (성과) 택시가맹사업 전국확대 및 플랫폼업체 서비스 조기출시
 - 가맹택시 서비스지역(^{3월}8개지역→^{8월}26개지역) 및 운행대수(^{3월}2,600대→^{8월}16,264대) 대폭 확대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*로 고객만족도 개선**
 - * 출퇴근 및 통학전용·실버케어·반려동물 동승, 안마기·카시트 구비 등
 - ** 가맹택시 대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, 94%고객이 만족(마카롱택시 자체조사)
 - 규제특례를 통해 플랫폼 업체가 시장에 조기진출하여 다양한 요금제 등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으로 운송업계 활성화 기대
 - * (반반택시) 자발적 동승시 요금할인 (스타릭스) 사전 확정요금제 (파파) 렌터카 기사알선 허용 (고요한 택시) 청각장애인 고용 자가용 택시영업 (마카롱 등 가맹택시) 앱미터기 기반 탄력요금제

②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<공정경제>

- **(현황)** 체불예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*을 통해 임금 등을 지급토록 하는 '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' 본격 시행('19.6) 중
 - *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,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
- 제도를 현장에 확실히 안착시키기 위한 점검결과, 시스템이 압류 등에 취약하고, 적용현장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 필요
- **(개선방향)** 부도·압류에도 임금이 보장되도록 지급시스템 개편, 체불 근절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, 적용현장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
- **(추진내용)** 노·사·전·정 협업을 통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 및 조달청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편 지속 점검, 공공기관 근절대책 수립

① **개선방안 마련** : 노·사·전·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(건설분과)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「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*」 마련('20.5)

* ①노무비 분리지급 시스템 구축, ②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③민간 확산

② **조달청 협력강화** : 개선방안에 따라 시스템 개편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 위해 조달청*과 긴밀히 협력('20.6, 건설혁신 협력회의)

* 조달청의 대금지급시스템(하도금지킴이)은 전체 공공현장의 약 70%에서 사용 중

③ **공공기관별 근절방안 마련** :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별 체불 근절 방안을 추가로 수립하고('20.8), **소 공공현장에 대해 체불점검 실시 중**('20.9)

- **(향후계획)** 내년 1월 소 공공현장 적용 위한 제도 및 운영기반 구축
 -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개정('20.6) 및 공공현장 적용대상 확대 (기타공공기관 등 포함, 5~8천만원 이상) 위한 건산법 시행령 등 개정('20.10 完)
 - *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주요기능은 9월부터 현장에 우선 적용 중